

대선과 교육대전환 시기, 교육의제를 제안한다

교육의창

김남철
전남교육연구소 운영
위원장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 국면이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비상계엄을 선언한 윤석열은 탄핵됐다. 그리고 조기 대선이 결정되고, 각 정당들은 대선 후보를 내세웠다. 때마침 오월은 대선 선거 열풍으로 뜨겁다. 저마다 각종 대선 정책을 내세우며 과열된 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각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졌고, 청소년의 삶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불행하다는 통계가 쏟아지고 있다. 한 해 5명 중 1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은 불평등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계층을 고착시키고 경쟁을 재생산하는 구조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교육현장은 더욱 악순환으로 파국으로 갈려가고 있다. AI 디지털 교과서에는 현장 교사의 검증 없이 도입됐고, 고교학점제는 지역과 학교 간 격차를 더욱 벌려놓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특정 지역에 사교육 특권을 제공하는 제

도로 변질됐다. 고교무상교육 조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예산 확보가 불가능해졌다. 경쟁과 갈등, 승자독식, 각자도생의 교육현장은 숨을 막힐 지경이다.

이처럼 교육 철학이 없고, 오직 자본의 논리에 순응하는 교육정책을 강요하던 윤석열 정권은 차라리 탄핵으로 중단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하늘이 도운 일이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렇다면 경쟁과 갈등에서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교육을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는가? 교육 주체들의 진지하고 성숙한 토론과 숙의 과정이 필요할 때이다. 질곡과 억압의 교육을 떨치고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치열하게 전개해온 전교조는 “교육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선언으로 10대 대선 의제를 제안했다.

1. 정부 주도의 왜곡된 교육정책 폐기, 2.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 정원 확충, 3. 입시경쟁 철폐, 대학서열 해소, 4. 교사의 정치·노동 기본권 보장, 5.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6. 학교를 민주적 공동체로 전환, 7. 장애학생 및 다양한 위기학생 통합지원체계 구축, 8. 국가 주도의 포용적 돌봄체계, 9.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10.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 실현 등이다.

우선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은 공공성과 평등성을 약화시키고, 교육현장

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하였다. 무엇보다 윤석열 교육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교육의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구약은 개선해야 하고, 적폐는 해소돼야 한다. 경쟁과 선택이라는 구조 아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의 본질인 평등한 기회 제공과 인간다운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시 세워야 한다. 따라서 현행 교육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대전환이 절실하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상생과 협력의 교육체제로 전환할 기회이다.

사실 10대과제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 실현방안과 법제의 개선안까지 포함한 실행 가능한 정책들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 과정은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 그리고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 가능하다.

더 이상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교육 철학과 교육 본질에 충실하면 된다. 더 이상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교육정책이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나눔과 배려, 그리고 상생하는 교육을 바로 세울 절호의 기회이다. 그리고 중앙과 지역의 교육격차를 줄이는 일도 같이 이뤄지길 바란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고금 이래의 진리이다. 교육개혁을 하는 절호의 기회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교황 레오 14세가 1일(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리는 가족, 어린이, 조부모 및 노인들의 희년 미사를 앞두고 교황청에 도착해 신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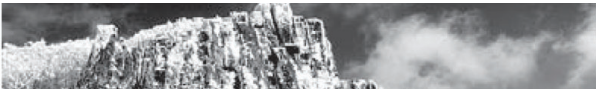
서석대

“라면 국물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성장이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겪을 수 있습니다.”

2008년 대한민국은 미국산 소고기와 광우병에 대한 공포가 온 사회를 지배했다. 라면 스프에 흔히 사용되는 소고기 분말을 놓고도 ‘미국산’과 ‘광우병’이라는 키워드가 따라붙었다. 특정 라면업체에는 ‘광우병에 걸린 소뼈를 갈아 넣어 스프를 만든다’는 괴담까지 퍼지며 불매운동을 벌이는 자는 움직임까지 일어났다. 관련 식품업계를 황청이게 할 정도의 파동이었지만, 지난해 국내 수입 육 시장의 미국산 소고기 점유율은 48.1%로 당시의 공포는 흔적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선을 앞둔 최근의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공포 중 하나는 ‘부정선거’다. 지난달 29일과 30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사전투표에서 투표소 밖으로 반출된 투표용지 등으로 현재도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음모론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없는 시점이다.

반대로 지난 총선부터 12·3 계엄, 탄핵정국에서까지 지속적으로 극우 보수 세력의 든든한 먹잇감으로 존재해 온 부정선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이슈화되는 분위기에 반감을 가지는 것도 당연하다. 논란이 거세지자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자가 침입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



고,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허위 신고까지 잇따르는 등 진위를 떠나 이미 우리 사회는 ‘부정선거’라는 프레임 안에서 혼란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공포감을 가장한 괴담 확산의 목적에는 언제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이 자리 잡고 있다. 선의나 정의 실현 등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그 이면에는 특정 진영의 이익이 뒤따라오기 마련이다. 우리는 과거 부정확한 정보들이 모여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공포가 누군가를, 혹은 수십년간 쌓아온 기업의 명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수차례 확인했다.

이것이 하나의 집단이나 기업을 넘어 국가와 민주주의라는 체제나 이념이라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선거 시스템이 부실해 관리와 보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부정선거의 프레임 안에서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며 허우적거리는 것은 부정선거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는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 불신하는 것은 사회를 유지시킬 수 없도록 만든다. 독재 국가에서는 부정선거 자체가 필요치 않다. 더 이상은 음모론에 휩쓸리는 우민(愚民)이 되지 않도록 눈을 똑바로 떠야 할 때이자, 정부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선거 시스템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새로이 모색해야 할 때다.

곽지혜 취재2부 기자

社說

‘전국 최고’ 사전투표 민주주의 축제였다

투표 인증 캠페인 ‘굿즈급’ 열풍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광주·전남에서 하나의 축제처럼 치러졌다. 투표장마다 길게 늘어선 행렬은 과거와 달리 무겁고 엄숙한 의무가 아닌, 자발적이고 즐거운 참여로 바뀌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민주주의는 나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있었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전남 56.5%, 광주 52.1%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보다 20%p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12·3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국민적 분노와 위기의식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광주·전남 유권자들이 보여준 이 높은 열기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강력한 바람이 투표로 표출된 결과다. 이번 선거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흐름은 전남일보가 선보인 ‘투표 인증용지’ 캠페인이다. ‘투표 안 한 사람, 나에게 연락도 하지 마’와 같은 문구를 담은 인증용지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굿즈급’ 반응을 이끌며 투표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기표 도장을 찍어 문장을 완성하는 ‘참여형 디자인’은 남녀노소 모두의 관심을 끌었고, SNS에서는 인증샷 릴레이가 이어지며 온라인 여론까지 자극했다.

광주·전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주의의 전진을 이끌어왔다. 이번 사전투표의 성과도 그 연장선에 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전투표 열기가 본 투표로 이어질 때 비로소 광주·전남의 힘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광주는 90%가 넘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14·20대 대선에서는 70~80%대의 투표율을 유지해왔다. 이번 선거에서의 열기와 결집 흐름이 계속된다면, 다시 한번 90%대 투표율을 넘보는 역사적 순간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최다 득표율, 최다 유권자 참여가 이번 선거에서 현실이 되길 기대한다. 이 땅의 미래를 바꾸는 힘은 결국 투표장에 선 한 사람, 한 사람의 손끝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교통약자 불모한 ‘파업’ 공공성 버릴텐가

시내버스 공적기능 책임져야

광주 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월급 인상과 정년 연장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차례 중재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노·사는 오는 4일 3차 중재 회의를 갖지만, 이날도 협상이 결렬되면 이튿날 첫 차부터 운행을 멈춘다고 한다. 시내버스가 멈추면 시민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준공영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사 양측의 원만한 타협을 촉구한다.

노조 측은 월급 8.2%인상과 함께 정년을 기존 61세에서 65세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광주 시내버스 운전기사 월 평균 임금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는 게 노조측 입장이다. 정년도 타 시·도는 평균 63세인 점, 퇴직 이후 재취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65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사측은 전체 비용의 70%가 인건비로 나가는 상황에서 월급 인상과 정년 연장 시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영제를 운영하는 광주시도 인건비 상승이 적자를 키워 결국

재정 부담을 높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광주 시내버스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수익 등이 급격히 줄면서 운영난을 겪고 있다. 적자는 지난 2019년 700억원대 수준이던 것이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부터 1162억원을 넘어 지난해 1402억원을 기록했다. 시내버스 하루 이용 인원은 지난 2013년 41만명에서 지난해 28만명까지 감소한 반면 유가 등의 비용은 큰 폭으로 오른 때문이다. 여기에 또 다시 노조의 주장대로 임금과 정년을 올릴 경우 이 부담은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물가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임금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요구는 공공성이라는 최소한의 책무를 저버린 행동이다.

준공영제의 취지는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있다. 노·사는 지금이라도 협상에 나서 ‘공적 기능’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상생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시내버스 파업은 교통약자들에 피해가 크다. 아무리 권리라고 하지만 교통약자를 불모로 하는 파업은 지지하기 어렵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